

# 학생 줄이지 않아도 대학 간 '통폐합' 가능... '4대 요건' 손질

### 운영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변화 조치 비수도권 '대학-사이버대' 통합

앞으로는 대학이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대학 간 통폐합이 가능해지는 등 대학 운영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운영 중인 대학은 기존처럼 큰 규모의 교지를 유지하지 않고도 대학 운영이 가능하도록 교지 면적 기준도 완화된다. 학령인구 감소, 원격교육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조치다. 비수도권에 위치한 사이버대학과 일반대학 간 통폐합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 ◆대학 운영 '3대 요건' 완화... 교육·재정 여건 개선

이번 개정안은 대학의 설립 기준과 운영 기준을 분리했다. 이에 따라 대학을 설립할 때는 교지·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유지하되 현재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교지 기준을 폐지해 '3대 요건'만 적용하기로 했다. 원격교육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따라

<b>교지</b>	교지 기준면적 폐지 *단, 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규정 등 건축관계법령 요건 충족 필요
<b>교사</b>	계열별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 인문·사회: 12㎡, 자연과학·공학·예체능·의학: 14㎡
<b>교사·교지 소유원칙</b>	교사확보율 100% 초과 시, 교사·교지 임차 가능 *단, 대학의 교지경계선으로부터의 최단거리가 20km 이하이며, 대학의 교지와 동일 시·군·구 내에 있을 것
<b>산정기준</b>	재학생 수가 학생정원보다 적은 경우, 교사·교원 확보 기준 산정 시 '재학생 수' 적용
<b>대학 통·폐합</b>	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편제완성정원 내에서 가능 *전공대학, 비수도권 사이버대학도 통·폐합 대상에 포함
<b>수익용 기본재산</b>	(양적기준 완화) '연간 등록금·수강료 수입액' 만큼 확보 필요 (성과기준 적용) '연간 등록금·수강료 수입액'의 2.8% 이상을 대학에 지원할 경우 확보 인정

자료/교육부

'교지'는 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규정 등 건축관계법령 요건만 갖추도록 하고 별도의 교지 면적 기준은 폐지한다. 교육부는 앞서 전체 교과목 20%까지만 원격수업 편성이 가능했던 규제를 지난 2020년 9월 폐지하고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해 원격수업을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3대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교사(대학 시설) 기준은 원격수업과 대학간 자원 공유 등 추세에 맞춰 완화된다. 개정안 따라 앞으로는 자연과학·공학·예체능·의학계열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을 최저주거기준상 1인당 최소 주거

면적인 14㎡로 일괄 적용된다. 단, 인문사회계열의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은 12㎡다.

교지·교사는 대학 설립 주체가 소유하는 게 원칙이지만, 교사 확보율을 100% 이상 충족하는 대학이 추가로 교지·교사를 갖추고자 할 경우에는 교지·교사를 임차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히,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재학생 수'가 학생 정원보다 적은 경우 정원 대신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사·교원 확보 기준을 산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 ◆대학 간 통·폐합 시 입학정원 감축 재 풀어

대학 간 통·폐합 시 일률적으로 입학정원을 감축하도록 했던 조건은 삭제된다. 그간 전문대가 대학과 합치려면 전문대 입학정원을 최대 60% 줄여야 했다. 앞으로는 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정원 감축 없이 통·폐합이 가능하다.

사이버대학과 일반대 간 통폐합을 허용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기존에는 대학, 대학원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간의 통폐합만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전공대학과 비수도권 사이버대학까지 확대한다.

교원 확보 기준도 일반대학의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기존 1/5에서 1/3까지 확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산업계 등 우수 전문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단, 교원 규모는 교육의 질과 직결되므로 계열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확보 기준은 ▲인문사회 25명 ▲자연과학/공학/예·체능 20명 ▲의학 8명으로 유지한다.

### ◆수익용기본재산 기준 완화해 법인 재정 기여 촉진

학교법인이 수익을 내 대학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법인이 연간 등록금·수강료의 2.8% 이상을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학교법인의 실질적인 수익 창출과 대학에 대한 재정 기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학교법인 분리' 조항도 새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2개 이상의 대학을 운영하거나, 대학 및 고등학교 이하 학교를 함께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교육부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법인을 분리할 수 있다. 이때 수익용 기본재산은 분리되는 법인에 속하는 학교의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분할하게 했다.

이후 조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디지털 전환 등의 시대·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대학의 자율적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혁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올 중3·고2 학업성취도 '표집평가' 실시

### 전체 학생 3%, 2만4835명 대상 "미래 핵심역량 진단 계기될 것"

중학교3학년과 고등학교2학년 학생 3%를 뽑아 학력 수준을 평가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오는 14일과 21일 각각 시행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의 3%를 표집해 학업성취 수준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특성



교육부. /메트로

에 대한 진단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는 272개 중학교 1만4642명, 204개 고등학교 1만193명 등 총 2만4835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교과는 중학교 3학년은 국어·수

학·영어·사회·과학, 고등학교 2학년은 국어·수학·영어다. 평가는 지난해 도입된 컴퓨터 기반 평가(CBT)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PC·노트북, 네트워킹 등이 설치된 학교 시험실에서 평가에 응시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CBT는 미디어, 도구 조작, 정보 검색 등 다양한 컴퓨터 기능을 통해 문제해결 과정을 현실적으로 재현한 것으로, 기존 지필평가(PBT)의 한계를 넘어 문제해결 역량을 효과적으로 측정한다"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 서울 '어르신 건강동행' 25개 자치구 확대

서울시는 내년 '어르신 건강동행 사업'을 25개 자치구로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어르신 건강동행 사업은 동네 의원의 전문적인 치료와 보건소의 방문 건강관리 연계돼 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라고 시는 설명했다. 현재 15개 자치구 시범사업에 263곳의 의료기관이 참여 중이다.

동네 의원을 찾은 어르신 중 영양관리, 재활치료, 복지상담, 생활습관 개선 등이 필요한 대상자의 의사가 보건소로 관리를 의뢰하면 건강동행팀(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으로 구성)이 2개월간 자택을 방문해 건강관리를 해준다. 보



서울시청. /손현영 기자

건소의 건강관리 서비스 결과는 의료기관으로 전달된다.

시는 보건소와 동네의원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건강서비스와 치료를 연계한 통합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 호서대학교 대학혁신지원 연차평가 2가지 평가 모두 'A 등급'

호서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발표한 대학혁신지원사업 2주기 1차년도 연차 평가에서 교육혁신전략 및 자체성과관리 두 평가항목 모두 'A 등급'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교육부가 대학이 자율 혁신을 통한 체질 개선으로 양질의 대학 교육 및 미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으로 전국 117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lhj@

##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전면 개정

### 교원 교육활동 보호 책임 등 강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개정안을 확정하고, 도의회 제출을 준비 중이다.

핵심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책임 강화다. 교육과정 등에 대해 학생의 권리와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되, 교사 수업권과 학생 학습권 침해에 명확히 책임을 부과한다는 취지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부터 학생인권과 교원의 균형을 강조하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 7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례 전면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유와 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생, 교직원, 보호자 권리와 책임 ▲다른 학생 학습권 보장 ▲학생, 보호자 책임과 의무 ▲상벌 점제 금지조항 보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유진채 기자 yujin@

오늘의 날씨

9월 13일 (수)

음력: 7월 29일

수도권 날씨

22~27°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6:12 | 해질 / 18:44

연천 20/26, 동두천 20/27, 가평 20/26, 파주 20/27, 서울 22/27, 양평 21/26, 인천 23/26, 수원 22/26, 용인 22/26, 평택 21/26, 백령도 20/25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수석 英총리 “중국 간섭 용납하지 않아” /사진 뉴시스  
▲머스크, 러 합정 기습공격 시도 우크라이나 접속 차단... 美정부 당혹

▲미국인들, 역대 가장 부유하지만... 카드빚도 가장 많다  
▲中 “대만문제는 중국의 내정”... 美바이든 언급에 반발



▲기시다,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오부치 딸 선대위원장 기용 가닥  
▲9·11 22주기 참석한 바이든... “테러리즘, 美영혼은 공격 못해” /사진 뉴시스